SIEW REPORT
Seoul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2026년 제4호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리포트

인천시장 선거 송도1동·송도2동의 3,030표와 1,440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 통계적 의심과 민주주의 신뢰의 과제 -

작성자: 이윤석 박사
발행일: 2026년 6월 11일
발행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이 리포트는 한국 교회 목회자와 진지한 기독교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포트는 고유 방법론 SIEW Framework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자료 탐색·정리와 초안 작성 과정에서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주요 사실과 논거는 연구진의 검토·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내용과 판단에 대한 책임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저작권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 이슈 한 줄 정의

- 인천시장 선거 송도1동·송도2동 관내사전투표에서 박찬대 후보 3,030표, 유정복 후보 1,440표가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전국 개표자료 분석 결과 동일 득표 현상은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문제의 핵심은 부정선거 입증 여부보다 국민의 의문에 대해 선관위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에 있음

□ 현재 상황 요약

- 송도1동·송도2동 관내사전투표에서 박찬대 후보 3,030표, 유정복 후보 1,440표가 각각 동일하게 나타나며 논란이 확산됨
-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를 “5억9천만분의 1” 수준의 확률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
- 그러나 전국 16개 광역권 개표자료 분석 결과, 완전 동일 득표쌍은 인천·광주전남·경북·경남에서도 실제 발견되었음
- 다만 송도 사례는 대도시에서 수천 표 규모의 득표수가 동시에 일치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설명이 필요한 특이 사례임

□ 핵심 문제

1. 통계적으로 특이한 사례가 발생하면 국민은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2. 그러나 낮은 확률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는 없음
3. 정치권의 과도한 확률 주장은 불필요한 불신을 확대할 수 있음
4. 선관위 역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설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5. 국민 신뢰는 결과 선언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형성됨

□ 결론

- 송도 동수 득표 사례는 통계적으로 특이하지만, 전국 자료를 보면 동일 득표 현상 자체는 실재함. 따라서 이 사례만으로 부정선거 단정은 부적절함
- 동시에 선관위는 국민의 의문을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개표상황표·전산입력 과정·통계적 분석 자료 등을 적극 공개하며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함
- 기독교인은 이 문제를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진실·공의·책임·신뢰의 문제로 바라보며, 음모론과 기관 맹신을 모두 경계해야 함

☞ 문의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www.siew.or.kr) 사무국
- 전화: 010-4682-0191 / 카카오톡 ID: siewsiew / 페이스북 그룹: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이메일: siewsince2021@naver.com / 후원: 농협 355-0077-2712-43 예금주: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S - Scan |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 **핵심 질문:**

"인천 송도1동·송도2동의 동수 득표 논란은 실제로 얼마나 특이한 현상이며, 전국 개표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1] 인천 송도1동·송도2동에서 동일 득표 사례가 발생했음

- 인천시장 선거 관내사전투표에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주요 후보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났음. 송도1동 관내사전투표에서 박찬대 후보는 3,030표, 유정복 후보는 1,440표를 얻었고, 송도2동 관내사전투표에서도 박찬대 후보는 3,030표, 유정복 후보는 1,440표를 얻었음
- 제3후보 득표수와 무효표 수는 서로 달랐음. 즉 전체 투표 결과가 완전히 복사된 것은 아니지만, 양대 후보의 득표수 두 개가 동시에 일치한 것임
- 일반 시민의 직관으로 보면 이런 결과는 매우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음. 한 후보의 득표수가 같은 것도 드문 일처럼 보이는데,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수가 두 지역에서 동시에 일치했기 때문임
- 특히 송도1동과 송도2동은 인접한 지역이고, 두 지역 모두 대도시 신도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사례는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2]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확률 주장이 제기되었음

-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발생 확률이 "5억9천만분의 1" 수준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음. 이런 표현은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선거 데이터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함. 특정 두 지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특정한 두 숫자가 정확히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전국 수백 개·수천 개의 집계단위 중 어느 두 곳에서든 비슷한 현상이 발견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
- 또한 결과를 모두 본 뒤 특이한 사례를 골라내고, 그 사례가 발생할 확률만 따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더 희귀해 보이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통계학에서 흔히 "사후 선택" 또는 "look-elsewhere effect"라고 부르는 문제와

연결됨

- 따라서 송도 사례가 특이하다는 말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5억9천만분의 1이므로 조작”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적절함

<표1>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석 결과: 완전 동일 득표쌍과 ±5표 이내 유사쌍

지역	관내사전투표		선거일투표	
	완전 동일	±5표 이내	완전 동일	±5표 이내
인천	1	2	0	0
서울	0	12	0	0
경기	0	15	0	1
충남	0	6	0	3
충북	0	4	0	3
강원	0	5	0	3
경북	0	38	1	28
경남	0	16	1	12
광주전남	5	70	0	73
전북	0	16	0	29
부산	0	3	0	1
대구	0	0	0	0
대전	0	0	0	0
울산	0	0	0	0
제주	0	0	0	0
세종	0	0	0	0
합계	6	187	2	153

※비고: 이 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은 [3]~[6]의 설명 참조

①위 표에서 확인되듯 완전 동일 득표쌍은 전체적으로 매우 드문 편임. 관내사전투표에서는 인천 1건과 광주·전남 5건, 선거일투표에서는 경북 1건과 경남 1건만 발견되었음

②반면 ±5표 이내 유사쌍은 지역에 따라 훨씬 많이 발견되었음. 특히 광주·전남, 경북, 전북, 경남처럼 농촌 읍·면 단위가 많은 지역에서 유사쌍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음

[3] 본 리포트에서는 전국 16개 광역권 개표자료를 비교 분석했음 (<표1> 참고)

- 인천 송도 사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개표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16개 광역권의 개표자료를 분석해 두 후보 득표수가 동시에 같은 사례가 있는지, 또는 ±5표 이내로 매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음
- 분석 대상은 각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주요 양당 또는 주요 경쟁 후보의 득표수였음. 관내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를 분리해 비교했음
- 분석한 지역은 인천,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강원, 경북, 경남, 광주·전남, 전북,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제주, 세종 등이었음
- 각 지역의 읍·면·동 단위 관내사전투표 및 선거일투표를 기준으로 1, 2위 후보의 득표수 쌍을 비교했고, 완전 동일 득표쌍과 ±5표 이내 유사쌍을 확인했음

[4] 완전 동일 득표쌍은 드물지만 실제로 존재했음 (<표1> 참고)

- 분석 결과, 완전 동일 득표쌍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음. 그러나 전혀 없는 현상은 아니었음
- 관내사전투표에서는 인천에서 1건, 광주·전남에서 5건이 발견되었음. 선거일투표에서는 경북에서 1건, 경남에서 1건이 발견되었음
- 그 외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제주, 세종, 전북 등에서는 완전 동일 득표쌍이 발견되지 않았음
- 이 결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 줌. 첫째, 동일 득표쌍은 매우 드문 현상임. 둘째, 그렇다고 해서 동일 득표쌍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님

[5] 송도 사례는 다른 동일 득표 사례보다 규모가 큼

- 광주·전남, 경북, 경남에서 발견된 동일 득표 사례들은 대부분 수백 표 규모의 읍·면 단위에서 나타났음. 예를 들어 100표대와 400표대, 300표대와 40표대, 500표대와 40표대 같은 조합들이었음
- 반면 인천 송도1동·송도2동 사례는 박찬대 후보 3,030표, 유정복 후보 1,440표라는 수천 표 규모의 득표수에서 발생했음
- 따라서 “동일 득표쌍 자체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과 “송도 사례는 그 중에서도 매우 눈에 띄는 특이 사례다”라는 결론은 함께 성립함

- 이 지점이 중요함. 송도 사례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갈 만큼 평범한 사례도 아님

[6] ±5표 이내 유사 사례는 지역 구조에 따라 많이 나타났음 (<표1> 참고)

- 완전 동일은 드물었지만,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5표 이내로 비슷한 사례는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음
- 광주·전남은 관내사전투표에서 70건, 선거일투표에서 73건이 발견되었고, 경북은 관내사전투표 38건, 선거일투표 28건이 발견되었음
- 반면 대구, 대전, 울산, 제주, 세종 등은 완전 동일은 물론 ±5표 이내 사례도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음
-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득표수의 발생이 단순히 정당 지지도만으로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줌. 지역의 읍·면·동 수, 투표 규모, 농촌 지역의 비중, 인구 분포, 정치 성향의 균질성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핵심 정리]

- 송도1동·송도2동의 3,030표와 1,440표 동수 득표 사례는 충분히 국민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이 사례임. 그러나 전국 16개 광역권 개표자료를 비교해 보면 동일 득표쌍은 드물지만 실제로 존재했음. 따라서 이 사례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하는 것은 과도함. 동시에 송도 사례는 대도시의 수천 표 규모에서 발생한 완전 동일 득표쌍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사례임. 문제의 핵심은 “부정선거냐 아니냐”를 즉각 단정하는 데 있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고 검증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있음

■ I — Interpret |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보는가

✔ **핵심 질문:**

“기독교 세계관은 통계적 의심, 부정선거 논란, 그리고 공적 기관의 설명 책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1] 인간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감

-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과 판단력을 주셨음. 시민이 선거 결과를 보고 이상함을 느끼고 질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 특히 송도1동·송도2동처럼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시에 일치한 사례는 일반적 지각 수준에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함
- 그러나 인간의 직관은 항상 정확하지는 않음. 사람은 우연히 발생한 패턴에도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음. 구름 모양에서 얼굴을 보거나, 연속된 숫자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는 것처럼, 인간은 무작위 안에서도 질서와 의도를 찾으려 함
-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 이성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인간 이성이 죄와 한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인정함. 따라서 “이상하게 보인다”는 감각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됨

[2] 의심은 출발점일 수 있으나 증거는 아님

- 성경은 거짓 증언을 엄격히 금함. 십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함. 이는 개인 윤리만이 아니라 공적 판단의 영역에도 적용됨
- 또한 성경은 중요한 판단에서 “두세 증인”의 원칙을 강조함. 이는 공동체가 중대한 사안을 판단할 때 단순한 인상이나 소문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증거와 검증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뜻임
- 따라서 송도 사례를 보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의문을 곧바로 “조작”이나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함
- 기독교인은 진실을 사랑해야 함. 진실 사랑은 의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증거와 검증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임

[3] 공적 권력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충분히 설명해야 함

- 성경은 권력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음. 국가는 질서를 세우고 악을 억제하며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공적 제도일 수 있음. 그러나 성경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도 분명히 보여줌
-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 헌법기관임. 그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독립성은 설명 책임의 면제가 아님

- 성경적 관점에서 공적 권한은 청지기적 책임을 동반함. 국민의 투표권과 민주주의 절차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국민이 의문을 제기할 때 더 높은 수준의 겸손과 투명성으로 답해야 함
- “문제없다”는 선언만으로는 신뢰가 회복되지 않음. 신뢰는 설명과 검증, 그리고 책임 있는 소통을 통해 형성됨

[4] ‘음모론’과 ‘기관 맹신’은 모두 피해야 함

- 선거 논란이 발생하면 사회는 두 극단으로 갈라지기 쉬움. 한쪽은 특이한 통계 현상을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단정하고, 다른 한쪽은 모든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며 덮으려 함
- 기독교 세계관은 이 두 태도 모두를 경계함. 인간은 죄인이므로 공적 기관도 오류와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음. 따라서 공적 기관에 대해 질문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함
- 그러나 인간은 또한 자기 확신과 진영 논리에 빠질 수 있음. 따라서 증거 없이 죄를 단정하는 것도 위험함
- 기독교인은 음모론자가 되어서는 안 됨. 동시에 권력 맹신자가 되어서도 안 됨. 의심하되 단정하지 않고, 검증하되 선동하지 않으며, 공의와 진실의 원칙 위에 서야 함

[5] 민주주의의 신뢰는 진실과 투명성 위에 세워짐

-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의 제도가 아님. 민주주의는 패배한 쪽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절차를 신뢰하는 제도임
- 선거에서 승자는 권력을 얻고 패자는 권력을 잃음. 따라서 선거 절차가 신뢰받지 못하면 패자는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고, 승자는 정당성을 의심받게 됨
-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임. 선관위가 실제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했다면, 그 공정성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기독교 세계관은 진실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 공적 기관도 마찬가지임. 참된 신뢰는 어둠 속의 권위가 아니라 빛 가운데 검증 가능한 정직성 위에 세워짐

[핵심 정리]

- 기독교 세계관은 송도 동수 득표 논란을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신뢰의 문제로 봄. 의심은 정당한 출발점일 수 있지만, 증거 없는 단정은 옳지 않음. 반대로 공적 기관은 의심을 음모론으로만 치부해서도 안 됨. 하나님 앞에서 공적 권한은 청지기적 책임이며, 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검증받아야 함. 기독교인은 음모론과 기관 맹신을 모두 경계하면서, 사실과 증거, 공의와 책임, 투명성과 신뢰의 원칙 위에 서야 함

■ E — Evaluate | 무엇이 왜곡되었는가

✔ 핵심 질문:

"송도 동수 득표 논란 속에서 무엇이 잘못 해석되고 있으며, 선관위와 정치권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1] 통계적 특이성을 부정선거 증거로 과잉 해석하는 문제가 있음

- 송도1동·송도2동의 동수 득표는 분명히 특이함. 그러나 특이하다는 말과 조작되었다는 말은 다름
- 전국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완전 동일 득표쌍은 실제로 발견되었음. 특히 광주·전남 관내사전투표에서는 5건, 경북과 경남 선거일투표에서도 각각 1건의 완전 동일 득표쌍이 발견되었음
- 따라서 "동일 득표쌍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하는 것은 데이터 전체가 보여주는 현실과 맞지 않음
- 장동혁 대표 등이 제기한 "5억9천만분의 1"식 주장은 대중적으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전국의 많은 집계단위 중 어느 두 곳에서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과장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정치 지도자들이 확률을 말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함. 통계적 언어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 강력한 힘을 갖지만, 잘못 사용되면 불신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

[2] 그러나 선관위가 “문제없다”만 반복하는 것도 왜곡임

- 반대로 선관위가 이런 의혹을 단순히 “문제없다”는 말로 덮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국민은 통계학자가 아님. 많은 시민은 동수 득표 사례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음. 그 의문을 단순히 무지나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국민 신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선관위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됨. 민주주의에서 공적 기관은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 확보해야 함
- 특히 “불복하려면 소송하라”는 식의 태도는 최후의 법적 절차로는 맞을 수 있지만, 국민과 소통하는 공적 기관의 자세로는 부족함. 모든 의문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라는 것은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될 수 있음

[3] 선관위의 설명 책임이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 선관위는 단순 해명자료 이상의 설명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예를 들어 송도 사례의 경우 선관위는 해당 투표구의 개표상황표 원본, 전산 입력 과정, 검증 절차, 제3후보 및 무효표 차이, 전국 유사 사례 분석, 통계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선관위가 조작했는가”만이 아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정말 원자료와 전산자료가 일치하는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가”, “개표 참관인은 무엇을 확인했는가”를 알고 싶은 것임
- 선관위가 이런 질문에 능동적으로 답하지 않으면, 빈 공간을 음모론이 채우게 됨

[4] 선거 불신은 사실보다 소통 공백에서 더 커질 수 있음

- 국민 불신은 언제나 명백한 증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때로는 설명되지 않은 의문, 불친절한 대응, 반복된 관리 실패, 과거의 불신 경험이 누적되면서 커짐
- 선관위는 이미 여러 논란을 겪어 왔음. 채용 비리, 사전투표 관리 논란, 전산보안 우려, 투표소 운영 문제 등은 선관위에 대한 기본 신뢰를 약화시켰음

- 이런 상황에서 송도 동수 득표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국민은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함. 선관위가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는 작은 의혹도 크게 번질 수 있음
- 따라서 선관위의 과제는 단순히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의심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설명 방식을 바꾸는 것임

[5] 정치권의 선동과 선관위의 폐쇄성이 서로를 강화할 위험이 있음

- 정치권이 통계적 특이 사례를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처럼 과장하면 사회적 불신이 커짐
- 반대로 선관위가 정당한 의문 제기까지 모두 음모론으로 취급하면 시민의 분노와 의심은 더 커짐
- 이 두 흐름은 서로를 강화함. 정치권의 과도한 공세는 선관위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선관위의 방어적 태도는 다시 정치권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됨
-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치권은 과장된 확률 주장과 부정선거 단정을 자제해야 하고, 선관위는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설명으로 응답해야 함
-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동도 아니고 침묵도 아님. 필요한 것은 검증 가능한 자료와 성숙한 설명, 그리고 책임 있는 공론장임

[핵심 정리]

- 송도 동수 득표 논란에서 왜곡된 것은 통계와 신뢰의 관계임. 통계적으로 특이한 현상은 의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부정선거의 결론이 될 수는 없음. 그러나 선관위가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신뢰 회복에 실패하는 길임. 정치권은 과도한 확률 주장으로 국민 불신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고, 선관위는 국민의 의문을 정당한 질문으로 받아들여 자료 공개와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함

■ W — Way Forward |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핵심 질문:

“선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관위, 정치권, 시민사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선관위는 통계적 의혹에 대한 설명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특이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단순히 “문제없다”고 처리해서는 안 됨
- 일정 기준 이상의 특이 사례가 발견되면, 선관위가 먼저 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의 구조를 설명해야 함
- 예를 들어 동일 득표쌍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의 투표수, 후보별 득표수, 무효표, 제3후보 득표, 개표상황표, 입력 과정, 다른 지역 유사 사례, 통계적 해석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선거는 국민 전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절차임. 따라서 선관위는 법적 방어보다 공적 설명을 우선해야 함

[2] 원자료 공개와 검증 가능성을 확대해야 함

- 국민이 신뢰하려면 원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선관위는 개표상황표, 투표구별 결과, 정정 이력, 전산 입력 절차, 집계 검증 방식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더 쉽게 공개해야 함
- 물론 개인정보나 보안상 민감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함. 그러나 후보별 득표수, 집계표, 정정 내역, 투표구별 공개자료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엑셀·CSV 등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이 중요함. 국민과 언론, 연구자들이 직접 분석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의혹이 줄어듦
- 선관위가 데이터를 공개하면 의혹이 더 커질 것이라고 두려워해서는 안 됨. 오히려 투명한 공개가 음모론을 약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

[3] 정치권은 검증하되 선동하지 말아야 함

- 정치권은 선거관리 문제를 감시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통계적 특이 사례를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처럼 단정해서는 안 됨

- “5억9천만분의 1” 같은 표현은 대중적 파급력이 매우 큼.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그 계산이 어떤 가정에 근거한 것인지, 실제 전국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함
- 정치권의 역할은 불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제도화하는 것임. 필요한 것은 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원자료 공개, 외부 검증, 통계적 설명, 재검표 절차 개선 같은 제도적 대안임
- 선거에 패배한 쪽이 부정선거 의혹을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사용하면 민주주의는 약해짐. 반대로 승리한 쪽이 모든 의혹을 음모론으로 매도해도 민주주의는 약해짐

[4] 시민은 의심하되 단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함

- 시민은 주권자로서 선거 과정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음. 이상한 결과가 보이면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함
- 그러나 의심은 사실 확인과 검증으로 이어져야 함.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단정적으로 퍼뜨리거나, 일부 특이 사례만으로 선거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음
- 시민은 감정적 확신보다 자료를 보아야 함. 개별 사례보다 전체 분포를 보아야 함. 그리고 가능하면 원자료를 확인하고 비교 분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
- 민주주의 시민은 맹신자도 아니고 음모론자도 아님. 성숙한 시민은 의심을 제기하되, 증거 앞에서 판단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함

[5] 교회는 진실과 신뢰 회복의 중재자가 되어야 함

- 교회는 선거 논란을 다룰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함.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관위 문제를 보는 시각이 크게 갈릴 수 있음
- 기독교인은 거짓 증언을 퍼뜨려서는 안 됨.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을 신앙의 이름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옳지 않음
- 동시에 교회는 공적 기관의 책임을 묻는 일을 회피해서도 안 됨. 공의와 정직은 개인 윤리만이 아니라 공적 제도의 문제이기도 함
- 교회는 “무조건 믿으라”도 아니고 “무조건 의심하라”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해야 함. 그것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존중하며, 공적 기관에는 투명성을 요

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절제와 책임을 가르치는 길임

- 선거 신뢰의 위기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진실성과 신뢰의 문제임. 교회는 이 문제 앞에서 진영의 확성기가 아니라 진실과 화해의 증인이 되어야 함

[핵심 정리]

- 선거 신뢰를 회복하려면 선관위는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원자료를 더 쉽게 공개하며, 통계적 의문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명해야 함. 정치권은 특이 사례를 부정선거의 증거처럼 과장하지 말고 제도적 검증 장치를 요구해야 함. 시민은 의심하되 단정하지 말아야 하며, 교회는 음모론과 기관 맹신을 모두 경계하면서 진실과 신뢰 회복의 중재자가 되어야 함. 민주주의 신뢰는 “문제없다”는 선언으로 회복되지 않음. 신뢰는 설명, 검증, 투명성, 책임을 통해 회복됨

■ Action Checklist

□ 나는 송도1동·송도2동의 3,030표와 1,440표 동수 득표 사례가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통계적 특이 사례임을 이해했다.

□ 나는 동일 득표쌍이 드물지만 실제 선거 데이터에서 발생 가능한 현상이며, 이 사실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 나는 “5억9천만분의 1” 같은 확률 주장이 실제 전국 자료와 비교 없이 사용될 경우 국민 불신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

□ 나는 선관위가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 신뢰 회복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나는 기독교인이 선거 문제를 다룰 때 음모론과 기관 맹신을 모두 경계하며, 사실과 증거, 공의와 책임, 투명성과 신뢰의 원칙 위에 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 Final Message

□ 인천시장 선거 송도1동·송도2동의 박찬대 3,030표, 유정복 1,440표 동수 득표 사례는 일반 국민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통계적 특이 사례임

□ 그러나 전국 16개 광역권 개표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동일 득표쌍은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이 사례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함

□ 정치권은 “5억9천만분의 1” 같은 자극적 확률 주장으로 국민 불신을 확대하기보다, 실제 자료에 기초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함

□ 선관위 역시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소송하라”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됨. 국민이 의심할 만한 현상이 발생했다면 개표상황표, 전산 입력 과정, 통계적 설명, 유사 사례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함

□ 민주주의의 신뢰는 강요될 수 없음. 신뢰는 설명과 검증, 투명성과 책임을 통해 회복됨. 기독교인은 선거 문제 앞에서 음모론과 기관 맹신을 모두 경계하며, 진실과 공의, 절제와 책임의 원칙 위에서 성숙한 시민적 감시와 신뢰 회복에 참여해야 함

※ 참고: 최근 SIEW REPORT 목록

- [2026년 제3호] “선관위는 누가 감시하는가? -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의 신뢰, 그리고 교회의 책임”
- [2026년 제2호] “한국 상황에서 ‘유신진화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2026년 제1호] “6.3 지방선거,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